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2025. 5. 2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문제점 및 진단	2
III. 추진방향 및 대책	3
1.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5
2.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7
3.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9
IV. 향후 추진일정	11

I.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18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개통 지연, 빈번한 장애·오류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 초래

* '00년대 초 구축된 행정·복지·세제·소송 관련 정보시스템 등의 재구축 사업

- 최근 지방세('24.2.), 나라장터('25.1.), 전자소송('25.1.) 등의 시스템 개통 시에도 여전히 장애·오류,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발생 중

-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스템 개통('22.9.) 후 잦은 오류 발생(약 3주간 신고된 미지급 등 사용자 문의(SR) 6만여 건)
- ▶ (교육부 4세대 나이스) 4세대 시스템 개편·개통('23.6.) 후 핵심기능 오류(접속 오류, 다른 학교 시험 정답 인쇄 등)로 학교 행정업무 마비
- ▶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개발 지연 및 과업변경 등으로 서비스 개통 지연('24.9. → '25.1.), 개통 후 접속·제출·기록열람 등 오류로 법원업무 지장

- **(경과)** '24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스템 운영 시 장애예방 및 대응복구 중심으로, 대규모 시스템의 구축 관리 지원에는 한계 존재
-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인력관리·책임감리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다수는 아직 미도입된 상태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4.1.) 주요 추진과제〉

- ▶ (상시장애예방) 위험징후 상시 감시 강화, 위험분산형 구조개선,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등
- ▶ (신속대응복구) 통합 장애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 지원체계 마련 등
- ▶ (안정기반강화) 공공부문 정보화역량 강화, 정보화사업 참여제한 개선, 수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을 위한 추가대책 필요

II. 문제점 및 진단

- ① **(복잡도)** 대규모 정보화 사업은 복잡한 구조, 시스템간 연계 등 개발·관리 난이도가 높아 사업 자체의 잠재위험이 매우 큼

- 최근 처리업무·정보량 증가*로 시스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면개편 위주의 사업 추진 관행으로 개발 난이도 가중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경우 22개 부처의 890개 시스템과 1,183종 정보 연계로, 360개의 복지사업 집행·관리(복지 예산 약 55조, 복지 대상자 약 2,700만 명)

➡ 전면 개편 외 대안 검토, 관리 가능 범위로 분리(모듈화) 등 사업 복잡도를 완화하여 개발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② **(경직성)** 긴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기술·환경 변화가 발생하나 사업 추진체계상 변화 반영이 어려워 정보시스템 품질 저하

- 특히, 사업 요구사항 구체화 단계(분석·설계)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일정 지연, 부실 개발, 사업자 간 분쟁 등이 초래*

* 기술·환경 변화, 과업내용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계획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
→ 서비스 개통 직후부터 차세대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 악순환 반복

➡ 기술·과업 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 개발, 분쟁 등을 예방

- ③ **(전문성 부족)** 대규모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나 공공부문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관리에 한계가 존재

- 민간 참여 기업도 잦은 인력 교체, 컨소시엄 구성상 제약요인, 부실한 사업 관리·감리 제도로 전문성·책임성 발휘에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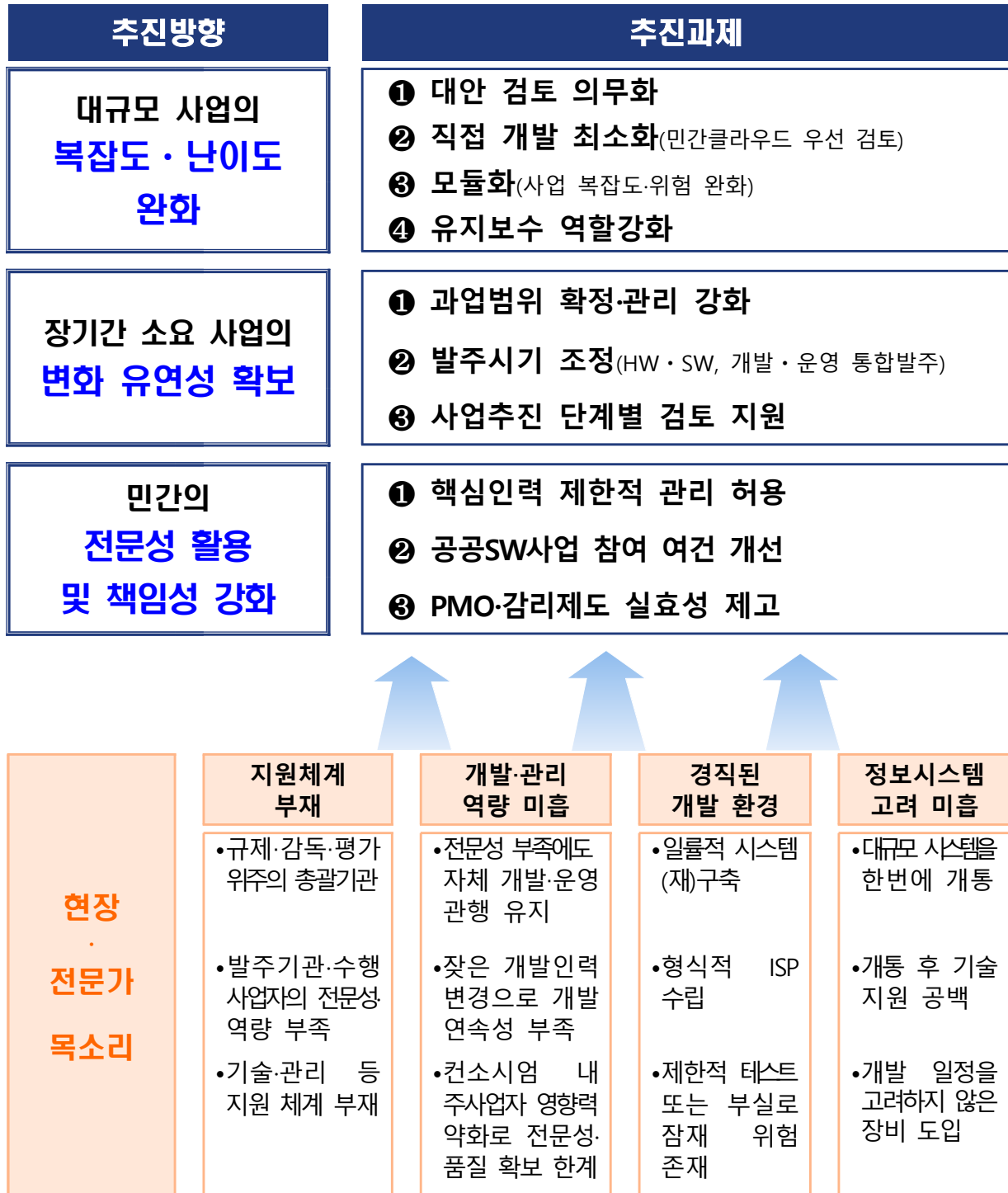
*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대규모·고난이도 사업의 경우에도 공모제도 상 평가배점 우대로 50% 이상 중소기업 참여가 일반적, 문서중심의 형식적인 감리 수행 등

➡ 전문성·책임성의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한계 보완 필요

Ⅲ. 추진방향 및 대책

비전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 핵심인력 관리,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24.1.31. 발표된 범정부 「디지털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도 대책」에도 既 포함된 내용

< 대규모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

단 계	현 행	개선안	비고
기획 & 예산	전면 개편 예산 요구 ※ 재개발과 고도화 혼재	⊕ 대안검토	▶ 대안 검토 및 사업 분리로 복잡도 완화
	ISP 수립 (정보화전략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	
	ISMP 수립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 모듈화 ⊕ 직접 개발 최소화	▶ 모듈화 설계를 통한 사업 복잡도 완화 ▶ 검증된 서비스·제품 이용으로 안정성 확보 및 난이도 완화
발주 & 계약	과업범위 심의 (과업심의위원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공공SW사업 참여여건 개선	▶ 대기업 참여 허용(700억원 이상)으로 민간 전문성 활용·책임성 강화
		⊕ 모듈화 반영 ⊕ 핵심인력 관리	▶ 모듈별 개통을 위한 통합발주, 시기조정 등 변화 유연성 확보 ▶ 핵심인력 관리 (제한적) 허용으로 민간 전문성 활용·책임성 강화
구축	분석	⊕ 모듈화	▶ 모듈화(분석·설계·개통)로, 사업 복잡도 완화
	설계	⊕ 과업범위 확정	▶ 과업범위 (재)확정으로 변화 유연성 확보
	구현	-	
	시험	-	
	(감리법인) 감리	-	
개통	개통	⊕ 단계별 지원 강화 (개통 준비/점검 지원)	▶ 단계별 검토 지원 강화로, 변화 유연성 확보
	점검·관리	⊕ 현장 점검·관리 강화	▶ PMO·감리 제도 실효성 제고로 민간 전문성 활용 강화
운영	총사업비 조정	-	
	시스템 운영	⊕ 통합발주(개발·초기운영)	▶ 개발·운영(초기 1년) 통합 발주로 변화 유연성 확보(+ 안정화 강화)
	노후화 재구축	⊕ 유지보수 역할강화	▶ 운영·유지보수 사업자에 대한 사전준비 과업 부여

1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구 분	현재	개선(안)
시스템 노후화 개선 방안	전면 개편·고도화 위주	다각적 대안 검토 및 안정성에 집중
시스템 자체 개발 범위	전체 시스템 직접 개발 중심	직접 개발 최소화
시스템 구현 방식	전체 일괄 개발·개통	서비스 모듈별 설계·개통
기존 시스템 분석·정비	신규 구축 사업자의 기존 시스템 분석·이관 등 지연	기존 유지보수-신규 구축 사업자 간 협업

□ **(주요내용)**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검토, 클라우드·상용SW 활용 확대 및 모듈화 추진

① **(대안 검토)** 대규모 전면 개편 등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이전 다각적 대안 제시로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전면 재개발 범위 축소

- 재구축*·고도화** 사업 분리검토 등 다각적 대안 검토 의무화

* 업무개선과는 무관한 시스템 개편(HW·SW 제조사 지원 종료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등)

** 업무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편(지역별 DB의 전국 통합, AI도입을 통한 업무개선 등)

- 차세대 사업은 노후화, 시스템 구조변경 등에 따른 재구축·고도화 외 부가적 기능 구현을 제한하여 복잡도를 낮추고 안정성에 집중

- ▶ 미국 정부는 노후 인프라 교체, 클라우드 전환, 시대에 뒤떨어지는 공공서비스 개선 필요 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범위에 대해서만 IT현대화(IT Modernization) 추진
- ▶ 호주 디지털청은 '대안 검토'와 '대안별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성과 제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

② **(직접개발 최소화)** 클라우드와 민간SaaS·상용SW의 적재적소 활용으로 직접 개발을 최소화하고, 안정성·보안성·비용효율성 최적화

* SaaS(Software as a Service): 인터넷을 통해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 ISP·예산 단계부터 민간클라우드 우선 검토를 원칙으로 클라우드 적용* 방법 및 SaaS·상용SW 활용 가능 여부 검토 강화

* (미국 클라우드 전략, **From Cloud First to Cloud Smart**) 공공기관들이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를 결합하여 시스템 특성에 맞는 최적의 IT인프라 환경 구축

〈 클라우드·상용SW 우선 도입·활용 검토 강화체계(안) 〉

계획 단계	기획 단계	예산 단계	사업 추진 단계
정보화사업 계획 검토 (과기부-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가) ISP 검토	(추가) 클라우드 예산 반영	제안요청서 검토 (행안부-사전협의)

- ▶ 미 국방부는 시스템 확장성 확보, 新기술의 신속한 도입,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략·전술·보안 등 전 영역에 민간 클라우드(AWS·MS·Google·Oracle) 서비스 적극 활용·추진('22년~'28년, 총 90억달러 규모)

③ (모듈화)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분리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모듈화하여 복잡도 및 위험 완화

- 사업 내용·범위를 분리해도 기능이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모듈형 단위로 설계를 전환하고, 모듈별 단계적 개통 추진

〈 모듈형 서비스 개념 비교(예시) 〉



▶ (지방재정시스템) 차세대 개통 시 예산편성('22.8.), 예산집행·보조금관리('23.1.), 대민서비스·정책지원('23.8.), 결산·보조금 부정수급('24.1.) 등 서비스 기능 단위 순차 개통으로 조기 안정화

④ (유지보수 역할강화)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사업에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 지연요인 해소

* 미사용 데이터·기능 정비, 연계 현황조사·정비, 기능·성능 테스트 참여 등

□ (조치계획) 과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지침·가이드 개정

- (대안 검토) 예산안 편성 지침 및 ISP 가이드 개정 등을 통해 대안 검토 절차 반영 및 재구축 사업 검토 체계 개선

- (직접개발 최소화)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의무화 및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도록 예산안 편성 지침 등 개정 검토

* (현재) 정액제 위주의 계약 → (개정) 사용량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 종량제 계약

- (모듈화) 정보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모듈형 구조 설계, 단계별 개통이 반영되도록 ISP 가이드 개정

- (유지보수 역할강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운영·유지보수사업 준비과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개정

【 복잡도·난이도 완화 - 개선과제별 세부조치계획(안) 】

개선과제	조치계획	세부 조치계획	주 체
대안 검토	대안 검토 절차 마련	예산지침, ISP 가이드 등 개정	기획재정부
	대안 마련·검토	대안 제시 대안 검토	개별 기관 책임형기술지원센터
클라우드·상용 SW 활용	활용 기반 마련	예산안 편성 지침 등 개정	기재부
	클라우드·SaaS·상용SW 도입·활용 검토체계 강화	민간클라우드 우선 도입 검토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기준 및 안전성확보 고시 개정	개별 기관 책임형기술지원센터 행정안전부
모듈화	원칙 제시	ISP 가이드 등 개정	기획재정부
	모듈화 설계 및 개발·개통	모듈화 설계·개발·개통 모듈화 설계 검증·관리 지원	기관 / 사업자 책임형기술지원센터
유지보수 역할강화	가이드 제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개정	행정안전부
	유지보수 적용	사업계획서 적용 검토	개별 기관

구 분	현재	개선(안)
과업범위 확정	사업발주 단계에서 확정	분석·설계 이후 재확정
발주방식	HW·SW분리발주 개발·운영사업 개별 발주	HW·SW 발주시기 조정 개발·운영(초기 1년) 통합발주
대규모사업 변화 관리	발주기관 담당 인력 부족 및 연속성 단절	대규모 사업 관련 조직 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추진 단계별 기술지원 체계 부재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해 핵심 단계별 기술지원

□ **(주요내용)** 대규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변화를 적기 반영하도록 과업 재확정 단계를 신설하고, 발주시기 조정 등 변화관리체계를 마련

① **(과업 확정)** 사업내용·범위가 구체화되는 분석·설계 단계 이후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 범위 재확정 단계 신설

- 요구사항 구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을 반영*하여 지속적 과업 증가·변화 등에 따른 품질 저하, 갈등 최소화

* NIA 책임형기술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조정 협의(다만, 이 과정에서 과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자원 중립성 확보 의무 부여)

② **(시기조정·통합발주)** 성공적 구축, 개통 초기 안정화를 위해 HW 및 상용SW 구매 시기를 조정하고 개발·운영 통합발주를 허용

- **(시기조정)** 모듈별 단계적 개통 일정에 따라 HW 및 상용SW 구매 시기를 조정하여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전성 확보

▶ 캐나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의 위험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조달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검증된 이후 차기 단계 진행(Gateway Review 제도)

- **(개발·운영 통합발주)** 시스템 구축·초기 운영(1년)을 통합 발주 하여, 개통 초기 단계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안정화 지원

▶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을 결합한 데브옵스(DevOps)는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 지속적인 통합·변화 적용을 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영역

③ (변화관리·기술지원) 총사업비 관리 핵심 단계별* 주요 변화 및 영향 등을 검토·관리하고, 대규모 사업 관련 조직·인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분석·설계, 개발 등

-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해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과업 변경, 신기술 적용 적정성, 모듈화 설계·대안 검토 등 전문기술 지원
- 대규모 사업을 위한 TF·추진단 등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 (조치계획) 분석·설계 이후 과업범위 확정, 통합발주 등을 위해 SW계약관리지침 등 개정 추진

- (과업 확정) 과업범위 확정 절차 의무화를 위해 SW계약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설계 단계 이후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현재) 발주 전에만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개정) 분석·설계 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범위 확정 추가

- (시기조정·통합발주) HW·SW 도입계획 수립·검토 체계 수립 및 개발·운영 사업 통합발주 기반* 마련

* 개발·운영이 통합된 데브옵스에 적합한 성능 유지관리(MM방식) 유형의 대가체계 신설 검토 등

- (변화관리·기술지원) 대형 정보화사업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NIA 책임형기술지원센터 신설('25.1.)

【 변화 유연성 확보 - 개선과제별 세부조치계획(안) 】

개선과제	조치계획	세부 조치계획	주 체
과업범위 확정·관리	관련 규정 개정	SW계약관리지침 개정	과기정통부
	과업범위 확정	과업범위 재확정(분석/설계 후)	기관 / 사업자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범위 재확정 단계 신설	과기정통부
		과업심의위원회 상정 과업 변경 안건 검토 지원	책임형기술지원센터
	SW사업정보 관리	SW저장소 등록·관리(결과물)	과기정통부
시기조정· 통합발주	관련 제도/지침 개정	SW 직접구매 시기 조정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 관련 규정 개정	조달청
		DevOps 관련 지침 개정	행안부
	발주계획 수립·점검	ISP 가이드 개정	기재부
		발주계획 수립	개별 기관
		발주계획 수립·검토 지원	책임형기술지원센터
	통합발주	HW·SW, 개발·운영(초기 1년) 통합발주	개별 기관
변화관리· 기술지원	관련 규정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기재부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행안부
	주요 단계별 검토 지원	변화 및 영향도 검토 (기존 예산 중심 ⇒ 과업범위 조정 등)	책임형기술지원센터

구 분	현 재	개선(안)
SW인력관리	인력관리 불허('18.8.~)	핵심인력 제한적 관리 허용
대기업 참여	참여 제한 (국가안보·신기술분야 예외 허용)	7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참여 가능
PMO·감리 실효성 제고	형식적 사업관리·점검	사업관리·점검 역할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대규모 정보시스템 품질 제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인력 연속성, 대기업 참여 확대, PMO·감리 실효성 강화

① **(핵심인력 관리)**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관리

* (예) 사업관리(Project Manager),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품질관리자(Quality Assurance), 핵심 개발자 등

② **(대기업 참여)**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해당사업은 대기업인 주사업자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중소기업 참여지분을 조정 추진(상생협력평가 배점 하향 조정)

〈 (예시)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비중 조정 방안 〉

구분	개선안						
상생협력배점 평가 (과기부 SW기술성 평가기준)	▶ 예외인정사업 및 200억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 참여지분을 50% 이상 만점 ⇒ 40% 이상 만점(배점 5점 ⇒ 3점) ▶ 700억원 이상 사업: 중견기업도 상생협력 대상에 포함(20% 이내)						
	구 분	기준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현 재		50%이상	45~50%	40~45%	35~40%	35%미만
	개 선 안	200억원 미만	50%이상	45~50%	40~45%	35~40%	35%미만
		예외인정사업 및 2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40%이상	35~40%	35%미만
		700억원 이상			40%이상 (단, 중소 20% 이상)	35~40%	35%미만 또는 중소 20%미만

③ (PMO·감리) 사업 수행 과정을 관리하고 품질을 보증해 주는 PMO*·감리의 역할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Project Management Office : 프로젝트 전반의 품질·위험관리를 하는 전문기관(민간·공공)

- (PMO) 대규모 사업 관리에 적합하도록 PMO 기업 참여요건 강화, 발주자·PMO의 역할·협업체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PMO의 사전 위험관리 강화, 발주자가 PMO에게 모든 사업관리 일임 지양 등

- (감리) 사업 품질확보를 위해 감리가 예외없이 모든 과업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사항은 현장 확인토록 개선

* (현재) 발주기관 합의 시 미완료 과업 점검 제외 → (개선) 모든 과업 점검

* (현재) 개선사항 문서 위주 확인 → (개선) 직접 현장방문 및 시스템 확인

□ (조치계획) 인력관리·상생협력평가 제도 등을 규정한 SW계약 관리지침, 기술성평가기준 등 개정 추진

- (핵심인력 관리) SW계약관리지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ISP 가이드 등을 개정하여 SW핵심인력 관리의 제한적 허용 근거와 절차 마련

- (대기업 참여) SW진흥법* 및 SW기술성평가기준 등을 개정하여,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지분을 조정

* 상출제 대기업의 대형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개정안 기발의('24.8.6.)

- (PMO·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감리수행 가이드 등 개정

【 전문성·책임성 강화 - 개선과제별 세부조치계획(안) 】

개선과제	조치계획	세부 조치계획	주 체
핵심인력 관리	관련 규정 개정	SW계약관리지침 개정	과기정통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행안부
		ISP 수립·점검 가이드 개정	기재부 / NIA
	핵심인력 지정	핵심인력 협의·조정 (제안요청서 - 제안서 - 협상 - 착수계)	기관 / 사업자
대기업 참여 활성화	공공SW사업 참여여건 개선	SW산업진흥법 등 개정	과기정통부
	주사업자 책임·권한 강화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 (중소기업 상생협력배점 조정)	과기정통부
PMO·감리	관련 규정 개정	PMO 관련 규정 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등)	행안부
		감리 관련 규정 개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제도 내실화	PMO·감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PMO선정 기준, 감리 현장확인 강화 등)	행안부

IV.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 완화		
■ 대안 검토 및 사업 분리를 위한 규정 개정(ISP 가이드 등)	'25.上	기재부
■ 대안 마련 관련 전문기관 검토 지원 시행	'25.下	과기부
■ 클라우드 적용방법 및 SaaS·상용SW 활용 검토 지원 시행	'25.下	과기부/ 행안부
■ 클라우드·SaaS·상용SW 활용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25.下	행안부
■ 모듈화 설계·개통을 위한 ISP가이드 개정안 마련	'25.上	기재부
■ 모듈화 구조 전환 관련 전문기관 검토 지원 시행	'25.下	과기부
■ 운영·유지보수 사업자 역할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	'25.下	행안부
2. 장기·ICT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 과업범위 확정·관리를 위한 지침 등 개정	'25.下	과기부
■ 과업범위 확정 지원을 위한 전문관리지원체계 운영	'25.下	과기부
■ HW, 상용SW 발주시기 조정을 위한 지침 등 마련	'25.上	기재부/과기부/ 행안부
■ 개발·운영 통합발주(DevOps)를 위한 규정 개정	'25.下	기재부/ 행안부/조달청
■ 전문기관을 통한 단계별 검토·기술지원 강화	'25.上	과기부
■ 대규모 정보시스템 사업 조직·인사 가이드 마련	'25.下	행안부
3.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 핵심인력 제한적 관리 허용	'25.下	과기부/ 행안부
■ 대형 공공 SW사업 참여여건 개선(700억 이상 대기업 허용)	'25.下	과기부
■ 대기업의 주사업자 책임성 강화(중소기업 상생협력 배점 조정)	'25.下	과기부
■ PMO·감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25.下	행안부